

## 서비스部門 成長과 政策方向

金 址 鴻

1988년 이후 韓國經濟는 급속한 經濟環境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급격한 賃金上昇과 平價切上으로 後發開途國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대내적으로는 製造業部門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서비스部門이 확대되었다. 더구나 1987년 이후 通貨膨脹, 非交易財部門에 대한 財政支出의 擴大, 급격한 平價切上, 製造業部門에 비해 정체된 非製造業의 生産性 등은 非交易財 성격이 강한 서비스부문의 超過需要와 勞動市場의 超過需要를 더욱 자극하였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脫工業化와 이로 인한 國際競爭力의 약화를 우려하게 되었다. 약화된 製造業의 競爭力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비스部門의 성장을 억제하고 人力을 製造業部門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이 실행되었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産業構造調整과 製造業 競爭力強化를 위해서는 自動化와 情報化를 통해 勞動投入을 절감하고 生産性を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비스産業이 확대되는 것은 經濟發展段階가 高度化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광고, 정보, 연구용역, 디자인, 유통, 통신 등의 발달이 製造業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製造業 위주의 産業政策에서 탈피하여 균형있는 産業政策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더욱이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으로 서비스部門에서도 점차 國際的인 競爭이 확대되리라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억제 또는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점진적인 市場開放 및 自律化를 통한 競爭體制를 도입하여 生産性向上에 기여하도록 하고 서비스質을 향상시킴으로써 國際化에 대비하여야 한다.

### I. 序 論

#### 1. 韓國서비스産業의 環境變化

1960년대와 1970년대에 韓國經濟는 製造業部

筆者: 漢陽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門을 원동력으로 하여 成長하여 왔으며, 1980년 대에도 계속해서 1차산업의 위축과 2차 및 3차 산업의 팽창이 이어졌다. 그러나 韓國經濟는 1988~89년 이후 産業環境의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賃金引上 및 平價切上和 함께 後進國의 工業化에 따른 추격으로 國際分業體制 속에서 주요 2차산업제품 공급기지로서의 韓國의 위치가

위험을 받고 있으며, 國內으로도 製造業에서 서비스部門으로의 인력이동이 나타남에 따라 韓國經濟史上 처음으로 3차산업 비중이 증가함과 동시에 2차산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국가적인 脫工業化 (deindustrialization)를 우려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韓國의 서비스산업은 이러한 對內的 膨脹과 더불어 對外的으로 우루과이라운드協商 진전에 따른 市場開放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까지 한국의 서비스부문은 國內으로 엄격히 규제되어 왔고, 海外競爭으로부터 보호받아 왔다. 따라서 서비스市場 開放에 앞서 서비스부문의 構造調整과 國際化에 적응하기 위한 政策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對內外的인 構造的 變化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논의는 대부분 서비스부문의 雇傭膨脹과 製造業部門의 勞動力 不足이라는 비대칭성에 집중되고 있으며, 政策代案으로 서비스産業의 억제와 製造業部門으로의 노동력 유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短期的 現象에 대한 논의는 많으나 그 근본원인과 長期的 政策對應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는 成長의 원동력을 주로 製造業部門 및 그 輸出의 확대에서 찾아왔던 韓國經濟의 成長過程에서 非交易財 성격이 강한 서비스부문에 대한 政策的 관심이 적었기 때문이다.

中長期的인 관점에서 서비스부문에 대한 主要 政策事案은 서비스부문의 構造變化的 양상과 결정요인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 외에도 전체적인 經濟構造가 서비스산업의 成長에 얼마만큼 의존하는 것이 적당한가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製造業競爭力

強化對策과 서비스産業政策과의 관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1988년 이후의 서비스産業 構造變化 속에서 製造業을 포함한 他部門과 서비스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거나 서비스산업의 生産性和 技術進步를 진작시키는 방법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章에서는 서비스産業의 成長을 GDP, 資本, 勞働比重 및 價格의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III章에서는 Neary의 모형을 이용하여 1980년대 후반에 나타난 서비스비중 증대의 原因에 대해 논의하겠다. IV章에서는 서비스産業의 發展方案을 제시하고, V章에서는 結論을 요약하기로 한다.

## II. 서비스産業의 成長

### 1. 經濟發展水準과 서비스部門 成長

일찍이 Clark와 Fisher는 經濟發展에 따라 1차, 2차, 3차산업으로 경제의 중심이 옮겨 간다고 관찰하였다. 韓國뿐만 아니라 先進國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4,000~5,000 달러 수준의 經濟發展段階에서 製造業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산업 비중은 점차 증대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Riddle (1986)은 각국을 4가지 부류(低所得國, 中低所得國, 中上所得國, 産業國)로 분류하고서, 흥미있는 관측치를 제시하였다(圖 1과 表 1 참조).

<表 1>에서 1인당 국민소득과 製造業比重 사

(表 1) 經濟部門別 國內總生產 및 雇傭의 構成比(1981)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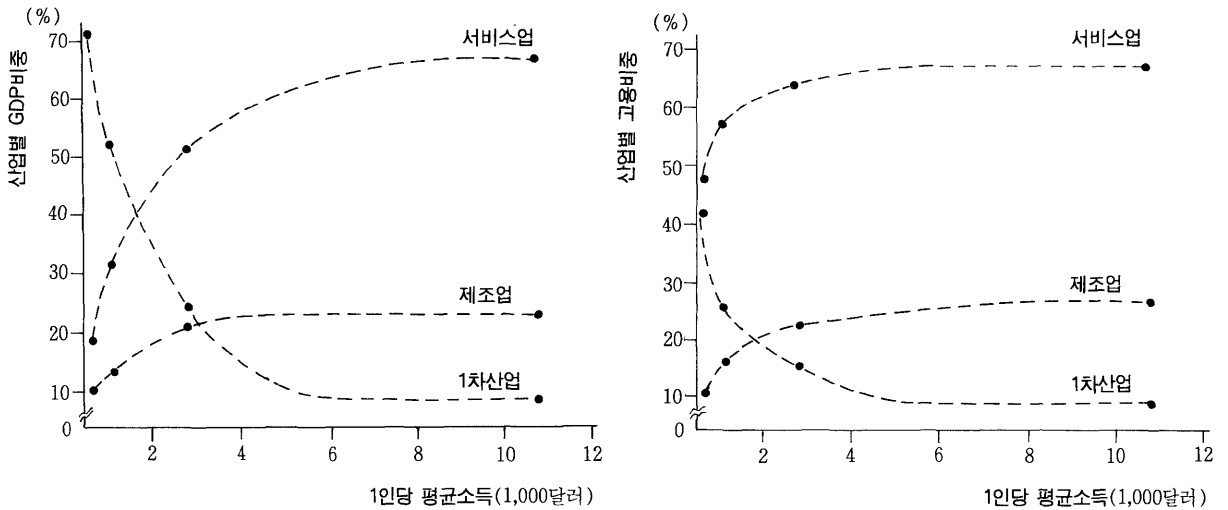
	發 展 範 疇			
	低 所 得 國	中 低 所 得 國	中 上 所 得 國	產 業 國
國內總生產				
1次産業	42	27	15	7
製造業	10	16	21	27
서비스業	48	57	64	66
雇傭				
1次産業	72	53	25	9
製造業	10	14	22	24
서비스業	18	33	53	67

註 : 다음의 자료에 기초하여 계산한 것임.

資料 : ILO,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Geneva : ILO, 1983 ; UN, *Yearbook of National Account Statistics 1981*, New York : UN, 1983.

[圖 1] 經濟部門別 國內總生產 및 雇傭의 構成比(1981)

(低所得國, 中低所得國, 中上所得國, 産業國)



〈表 2〉 서비스業種別 國內總生産比重(1981)

	發 展 範 疇			
	低所得國	中低所得國	中上所得國	產 業 國
전기·수도·가스	1.5	1.7	2.2	3.3
건설업	4.3	4.7	6.4	6.5
운송 및 통신	6.6	7.3	8.4	7.8
도소매업	12.1	16.0	16.7	13.9
사업서비스	6.1	10.2	12.6	13.7
공공행정	12.1	11.2	12.2	14.0
사회서비스	5.5	5.7	5.3	6.4

註: 다음의 자료에 기초하여 계산한 것임.

資料: UN, *Yearbook of National Account Statistics 1981*, New York: UN, 1983.

이에도 正(+)의 상관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서비스업 비중의 증가속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經濟發展過程에서 農業으로부터 製造業으로, 製造業部門으로부터 서비스부문으로 자원이전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론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低所得國 및 中低所得國의 자료를 보면, 農業部門을 떠난 노동력은 製造業部門으로 먼저 이동한 다음 서비스부문으로 차례로 이동한다기보다, 製造業部門과 서비스부문 양쪽으로 동시에 이동한다. 다시 말해서, 製造業部門과 서비스부문(교육서비스 제외) 양쪽의 成長이 동시에 일어난다. 제조업부문에서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資本投資를 필요로 하는 데 비해서 서비스부문은 자본투자규모에 비해 보다 많은 수의 노동력을 흡수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中上所得國(주로 NICs 또는 NIEs)에 있어서

서비스부문의 對GDP比重이 늘어난다는 것은 生活水準의 向上(높은 1인당GNP를 비롯하여)과 관련이 있다. 이들 나라가 전형적인 製造業 중심의 경제로 묘사되고 있지만, GDP의 60% 이상이 서비스부문으로부터 비롯되며 製造業部門의 GDP비중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中上所得國 서비스업종의 뚜렷한 특징은 固定資本形成이 물리적 하부구조로부터 사업서비스로 이동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表 2 참조).

이미 產業化가 끝난 先進國에서는 GDP에 대한 부문별 기여도가 1차산업 7%, 製造業 27%, 서비스업 66% 수준에서 안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서비스부문 내에서 건설업, 도소매업, 운송·통신은 정제되는 대신 사업서비스(예:은행, 보험, 부동산, 회계광고 그리고 법률 서비스 등)와 공공행정, 사회서비스 비중이 증대된다.

## 2. 韓國 서비스産業의 GDP比重 推移

韓國 서비스部門의 發展過程과 현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60년대 이후 최근까지 25년간 韓國經濟의 成長 및 發展의 원동력은 製造業部門이었다. 수출의 빠르고도 지속적인 성장은 製造業部門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貿易과 운송서비스와 같은 일부 서비스産業에 대한 수요를 뒷받침해 주기도 하였다. 물론 동 기간중에도 經濟開發의 노력으로 건설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유지되어 왔다.

産業別 GDP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최근까지 1차산업은 계속 그 비중이 하락하고, 2차산업은 經濟成長 원동력으로서 계속 비중이 증가하여 왔으나 1988년의 32.5%를 정점으로 비중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대신 서비스部門 비중이 1988년 이후 빠르게 확대되었다(表 3, 圖 2 참조).

서비스업 내에서는 1980년대 후반기 이후 운수·창고·통신서비스와 금융서비스가 꾸준히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금융서비스부문의 對 GDP 比重은 1985년의 11.8%에서 1991년에는 15.2%로 증가하여 상업부문(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을 능가하는 서비스부문 最大業種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건설서비스부문은 1989년 이래로 급격히 팽창하여 1991년에는 GDP비중이 금융서비스와 비슷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 GDP비중이 비교적 작은 서비스업종 중에서는 전기·가스·수도부문의 GDP비중이 1989년 이후 감소하고 있어 사회간접자본투자에 소홀했음을 나타내며, 반면 정부서비스는 1988년 이후 빠른 성장을 보이

고 있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

운송업과 건설업은 성장률의 변동이 가장 큰 업종이었다. 운송업은 1987~90년 기간에 큰 성장을 보였으며, 건설업은 1986년 이래로 호황을 누리고 있고 1990년에는 23%의 고속성장을 하였다. 도소매업은 1985년에는 가장 비중이 큰 서비스업종이었으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그 비중이 1987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반면 1990년에는 금융·보험·부동산이 가장 비중이 큰 서비스업종으로 등장하였다.

## 3. 서비스産業의 資本 및 勞動比重 推移

産業別 資本스톡의 추이가 (表 4)와 [圖 2] (b)에 나타나 있다. Pyo(1992)의 연구에 따르면 總資本스톡(gross capital stock) 기준으로 볼 때 製造業에 고용된 資本스톡의 比重은 1970년대 및 1980년대를 통해 증가해 왔으나 1987년의 30.2%를 정점으로 하여 1990년에는 28%로 낮아지고 있다. 반면 서비스部門의 總資本스톡比重은 1970~80년대를 거쳐 감소하다가 1987년의 62.3%를 低點으로 하여 높아지고 있으며 1989년 이후 크게 증대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종 중 개인 및 공공서비스부문의 比重增大가 두드러지는 반면, 운수·창고·통신부문과 전기·가스·수도부문의 投資減少에 따라 資本스톡의 비중이 감소되고 있다.

産業別 雇傭의 比重推移가 (表 5)에 제시되어 있다. 韓國經濟는 先進國들과 마찬가지로 經濟發展과 함께 서비스부문의 고용증가를 보였다:

〈表 3〉 經濟活動別 國內總生產 增加率 및 構成比<sup>1)</sup>(1985~91)

(단위 : %)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sup>2)</sup>
GDP 증가율	7.8	13.2	12.6	12.0	6.2	9.7	8.9
농림어업	3.8 (12.8)	4.6 (11.5)	-6.8 (10.5)	0.8 (10.5)	-1.1 (10.1)	-5.1 (9.0)	-0.8 (8.1)
광업	3.8 (1.0)	8.9 (1.0)	-1.3 (0.8)	-0.6 (0.7)	7.3 (0.6)	-10.8 (0.5)	0.3 (0.4)
제조업	7.1 (30.3)	18.4 (31.7)	18.8 (32.2)	13.4 (32.5)	3.7 (31.2)	9.1 (28.9)	8.5 (27.5)
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	13.4 (2.8)	25.3 (3.1)	12.3 (2.9)	9.8 (2.6)	10.7 (2.4)	16.3 (2.1)	8.3 (2.1)
건설업	4.4 (7.7)	5.0 (7.1)	12.7 (7.4)	9.5 (8.1)	16.1 (9.7)	23.7 (13.2)	11.3 (15.4)
도소매, 음식숙박업	8.3 (12.2)	16.6 (12.5)	14.9 (12.8)	11.1 (12.4)	2.9 (11.7)	7.9 (10.9)	8.6 (10.6)
운수·창고·통신	4.8 (7.6)	9.8 (7.6)	13.0 (7.5)	11.8 (7.2)	11.0 (7.3)	11.5 (7.0)	13.0 (7.1)
금융·보험·부동산	15.8 (11.8)	11.7 (11.8)	15.9 (12.1)	16.4 (13.0)	11.1 (13.9)	13.3 (14.5)	11.9 (15.2)
사회·개인서비스업	13.1 (4.1)	11.0 (4.1)	7.9 (3.9)	9.3 (3.8)	11.9 (4.1)	9.4 (4.1)	9.6 (4.2)
정부서비스	1.9 (7.2)	3.4 (7.0)	3.4 (6.9)	4.5 (6.9)	4.7 (7.5)	4.6 (7.7)	3.5 (7.9)
민간비영리서비스	12.4 (2.5)	9.0 (2.4)	6.7 (2.4)	10.6 (2.4)	7.9 (2.5)	7.1 (2.5)	5.2 (2.5)

註 : 1) 국내총생산증가율은 1985년 불변가격으로 측정된 것임.

2) 1991년도 수치는 추정치임.

괄호 안의 숫자는 당해연도 GDP비중임.

資料 : 統計廳, 『主要經濟指標』, 1992.

〈表 4〉 製造業과 서비스部門의 總資本스톡 推移

(단위 : 10億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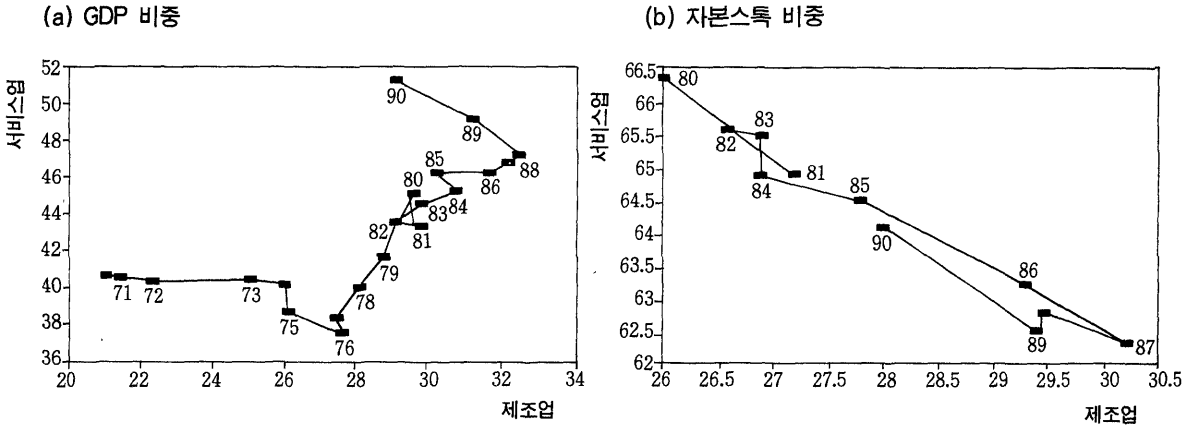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기,가스, 수도	건설업	도소매, 숙박, 음식	운수, 창고,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개인, 공공 서비스
1980	9,102 (6.9)	900 (0.7)	34,458 (26.0)	87,866 (66.4)	5,886 (4.4)	2,866 (2.2)	7,171 (5.4)	14,091 (10.6)	43,983 (33.2)	13,868 (10.5)
1981	11,674 (7.2)	1,194 (0.7)	43,824 (27.2)	104,720 (64.9)	7,777 (4.8)	3,631 (2.2)	8,944 (5.5)	18,524 (11.5)	54,189 (33.6)	18,655 (11.6)
1982	14,130 (7.1)	1,445 (0.7)	53,254 (26.6)	131,340 (65.6)	9,654 (4.8)	4,401 (2.2)	10,843 (5.4)	21,299 (10.6)	62,125 (31.0)	23,020 (11.5)
1983	15,774 (6.9)	1,676 (0.7)	61,598 (26.9)	150,113 (65.5)	11,494 (5.0)	4,974 (2.2)	12,137 (5.3)	24,822 (10.8)	69,288 (30.2)	27,398 (12.0)
1984	19,568 (7.4)	1,941 (0.7)	70,971 (26.9)	171,349 (64.9)	12,995 (4.9)	5,657 (2.1)	12,822 (4.9)	28,025 (10.6)	77,120 (29.2)	34,729 (13.2)
1985	21,217 (6.9)	2,300 (0.8)	85,160 (27.8)	197,222 (64.5)	15,080 (4.9)	6,412 (2.1)	15,912 (5.2)	32,505 (10.6)	86,004 (28.1)	41,310 (13.5)
1986	23,470 (6.8)	2,617 (0.8)	101,775 (29.3)	219,747 (63.2)	16,796 (4.8)	7,030 (2.0)	18,586 (5.3)	35,594 (10.2)	94,544 (27.2)	47,198 (13.6)
1987	27,211 (6.8)	2,945 (0.7)	120,844 (30.2)	249,350 (62.3)	18,285 (4.6)	7,930 (2.0)	21,110 (5.3)	39,327 (9.8)	107,143 (26.8)	55,555 (13.9)
1988	32,580 (7.1)	3,172 (0.7)	136,034 (29.5)	289,595 (62.8)	19,968 (4.3)	8,948 (1.9)	23,776 (5.2)	44,828 (9.7)	127,248 (27.6)	64,827 (14.1)
1989	38,279 (7.3)	3,970 (0.8)	153,825 (29.4)	326,491 (62.5)	22,667 (4.3)	10,843 (2.1)	28,846 (5.5)	49,651 (9.5)	137,474 (26.3)	77,010 (14.7)
1990	46,712 (7.2)	4,127 (0.6)	180,793 (28.0)	414,295 (64.1)	26,396 (4.1)	13,875 (2.1)	33,880 (5.2)	56,282 (8.7)	184,806 (28.6)	99,057 (15.3)

註 : 괄호 안의 숫자는 당해 總資本스톡에 대한 비중임.

資料 : Hak K. Pyo, "A Synthetic Estimate of the National Wealth of Korea", 1992.

[圖 2] 韓國의 서비스産業과 製造業의 GDP 및 總資本스톡 比重推移

(단위 : %)



(表 5) 産業別 就業構造

(단위 : %)

Year	농림어업	광공업	서비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 (합계)
1970	50.4	14.3	13.2	2.9	35.2
1975	45.9	19.1	18.6	4.3	35.0
1980	34.0	22.6	21.7	6.1	43.4
1985	24.9	24.4	23.4	6.1	50.7
1986	23.6	25.9	24.7	5.7	50.5
1987	21.9	28.1	27.0	5.6	50.0
1988	20.7	28.5	27.7	6.1	50.9
1989	19.5	28.2	27.6	6.5	52.3
1990	18.3	27.3	26.9	7.4	54.4
1991	16.7	27.0	26.6	8.3	56.3

資料 : 統計廳, 『主要經濟指標』, 1992.

1975년에 35%, 1980년에 43.4%, 1985년에 50.7%, 1990년에 54.4%. 이는 주로 1次産業 雇傭比重의 지속적인 감소에 의한 것이었다. 製造業部門의 고용비중은 서비스부문보다는 낮은 속도로 증가했다. 製造業部門의 고용은 1986~88년 기

간에 큰 성장을 보였으나 1988년의 27.7%를 정점으로 감소되는 반면, 서비스부문의 고용비중은 1987년의 50%에서 1991년에는 56.3%로 급격히 증가했다.

製造業部門과 서비스部門간의 상대적 雇傭比重



의 변화가 [圖 3]에 나타나 있다. 1988년 이전 工業化期間 동안에는 製造業部門과 서비스部門의 雇傭比重이 서로의 成長을 제약하지 않고서도 동시에 증가한다. 그러나 1988년 이후에는 製造業部門의 고용비중이 감소하는 한편 서비스部門의 雇傭比重이 증가한다. [圖 3]에서 보듯이 總雇傭에서의 비중은 1976년까지는 2次産業增加·3次産業減少의 추세를 보이다가 1976~88년중에 2次産業增加·3次産業增加, 1988년 이후에는 2次産業減少·3次産業增加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製造業과 서비스의 GDP 및 資本比重的 변화와도 일치한다(圖 2(b) 참조).

설명의 편의를 위해 韓國의 雇傭 및 産業構造變化를 1976년까지는 1단계, 1976~88년까지는 2단계, 1988년 이후는 3단계로 구분하여 본다면, 1단계는 「아서 루이스」(Arthur Lewis) 교수의 전환점(turning point)이론<sup>1)</sup>에서 보듯이 農業部門의 잠재실업군이 實質賃金の上昇 없이 製造業으로 이동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때의 産業政策은 資本(國內 및 海外貯蓄) 동원을 극대화하여 經濟活動의 量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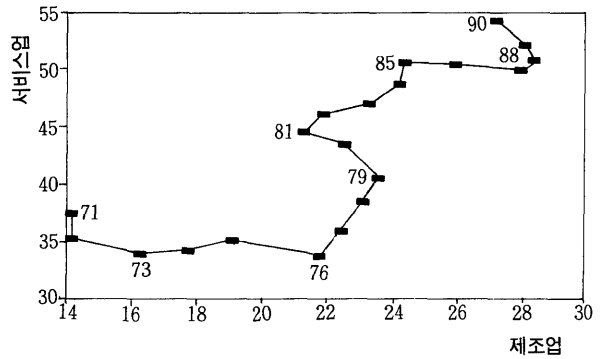
2단계에 들어서는 農業部門으로부터 잠재실업군의 고갈에 따른 實質賃金上昇과 함께 輕工業의 競爭力의 變化가 나타났다. 1976년 이후 韓國은 輕工業輸出의 상대적 위축과 함께 重化學工業投資를 증대시켜 왔다. 이때의 産業政策은 資本과 勞動의 效率的인 供給과 結合에 주안점을 두

1) 루이스의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에 대한 설명은 Lewis와 Fei & Ranis의 저서에 설명되어 있음. 배무기 교수의 논문(1982)에서도 한국의 Lewisian 전환점을 1976년경으로 주장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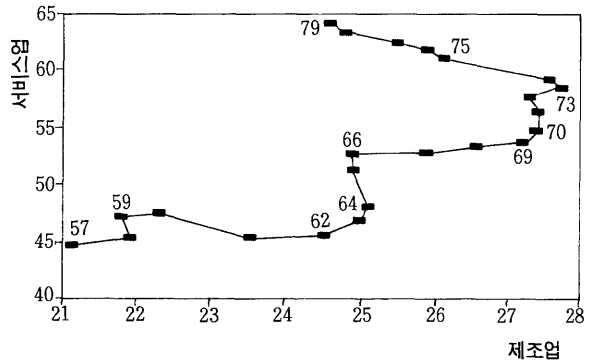
[圖 3] 韓國·日本·臺灣의 서비스産業과 製造業의 雇傭比重 推移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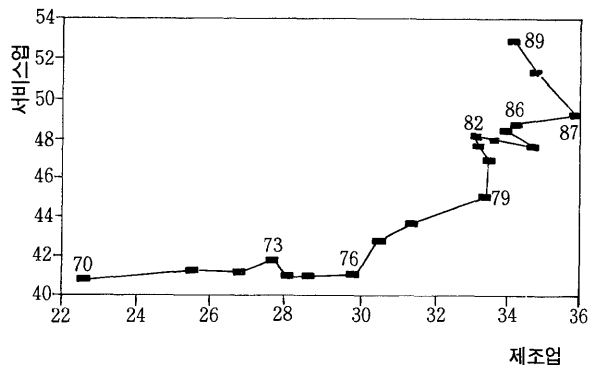
〈韓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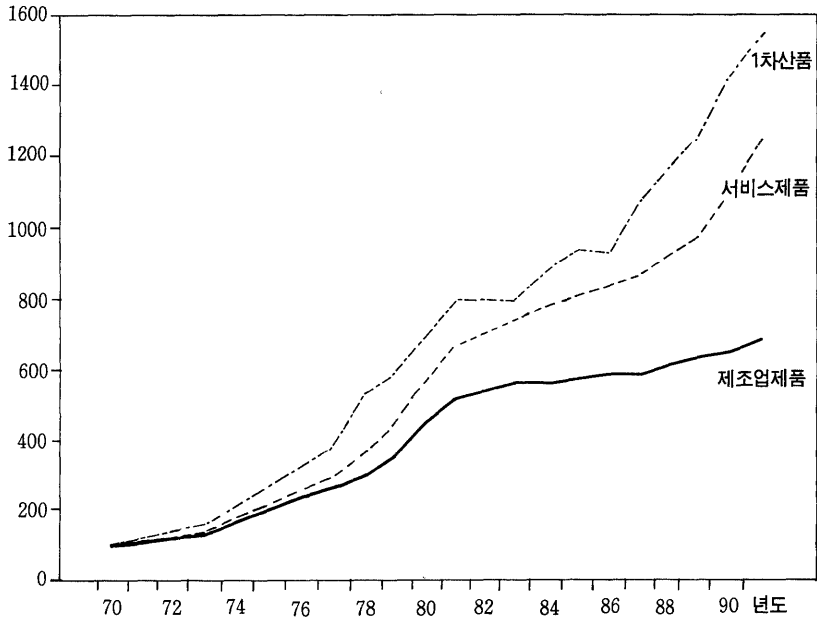
〈日本〉



〈臺灣〉



[圖 4] 1次產品, 製造業製品, 서비스製品의 價格推移



었다.

3단계에 들어서면서 2次産業과 3次産業의 팽창은 서로에게 제약요인(trade-off)이 되기 시작한다. 즉 完全雇傭에 접근하면서는 3次産業의 성장은 1次産業뿐만 아니라 2次産業의 雇傭減少를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産業政策의 목표는 희귀 자원이 되기 시작한 勞動의 節約 및 勞動生産性 極大化와 勞動力再配置에 따른 摩擦解消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단순화한 3단계 모형을 假定하기에는 1988년 이후의 기간이 너무 짧으므로, 韓國과 마찬가지로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經濟成長 경험을 한 日本과 臺灣의 경우가 참고가 될 것이

2) 日本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2차산업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한국통계와 비교하기 위해 건설업은 3차산업으로 분류하였음.

다. [圖 3]에서 보듯이 日本과 臺灣은 韓國과 비슷한 産業別 雇傭構造變化를 보이고 있으며, 臺灣은 1976년 및 1987년을 기점으로, 日本은 1962년 및 1973년을 기점으로 韓國과 마찬가지로 2단계와 3단계에 각각 진입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日本은 1973년(製造業 雇傭比重 27.7%, 서비스雇傭比重 58.8%) 이후 3단계에 진입하여 韓國의 1988년(製造業雇傭比重 28.5%, 서비스雇傭比重 50.9%) 이후와 매우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sup>2)</sup>.

#### 4. 韓國 서비스價格의 相對的 推移

農水産物, 工産品, 서비스로 나누어 價格變化推移(圖 4 참조)를 보면 1980년대 초반 이후 서비스價格과 農水産品價格이 工産品價格에 비하여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1989년 이후 가격상승률에 있어 서비스가 農水產品보다 앞서고 있다. 이는 工產品의 供給彈力性이 크데다 1980년 중반 이후 본격화된 輸入擴大를 통해 需要를 충족시킬 수 있었으므로 工產品價格이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非交易財 성격이 강한 서비스는 供給彈力性이 낮으며 所得增大에 따른 需要增加 및 需要의 高級化趨勢가 바로 價格上昇으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 Ⅲ. 서비스部門 擴大에 관한 理論

1988년 이후 韓國의 서비스部門 比重이 확대되고 서비스價格이 빠르게 引上되는 현상을 단순히 過消費에 기인하는 일시적 景氣循環現象으로 보기에 그 추세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여 經濟構造的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를 Neary(1980)의 모형을 이용하여 좀더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서비스部門의 가장 큰 특징인 非交易性을 도입하여 價格이 非伸縮的

일 때 勞動市場 및 非交易財市場의 均衡條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고 外生的인 政策效果를 分析하고자 한다.

#### 1. 基本模型<sup>3)</sup>

固定換率制度下의 소규모 경제 (small economy) 내에는 非交易財 ( $X_1$ )와 交易財 ( $X_2$ ), 勞動이 각각  $p_1, p_2, w$ 에 거래되고 있고, 經濟內에는 家計, 企業 및 政府와 같은 경제주체가 존재한다. 소규모 경제이므로 교역재의 가격  $p_2$ 는 해외로부터 결정된다. 모든 재화는 定常財이며, 자기가격 탄력성 (own-price elasticity of demand)은 陰 (-)이고, 粗代替財 (gross substitute)라고 가정한다.

#### 家計:

家計의 재화소비와 노동공급은 가격에 대한 예상뿐만 아니라 失業 및 재화배급 (rationing)에 대한 예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家計가 각각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通常的 財貨需要函數 ( $x_i$ ) 및 勞動供給函數 ( $l_i$ )를 도출할 수 있다.

$$x_i = x_i(p_1, p_2, w, I) \quad (\text{단, } i = 1, 2, I \text{는 非勞動所得})$$

$$l_i = l_i(p_1, p_2, w, I)$$

#### 企業:

모든 企業은 財貨市場 및 要素市場에서 가격수용자 (price taker)로서 행동한다. 따라서 企業의 행위는 유일한 생산요소인 노동의 고용량 ( $e_1, e_2$ )

3) 市場의 均衡은 價格調節에 의해서가 아니라 數量調節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성립된다고 가정한다. 즉 자율적인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각 시장에서 발생하는 需要와 供給의 불일치는 超過하는 부분만큼 경제주체에 대해 산출물을 配給 (rationing)함으로써 해결하게 되고 이러한 配給效果는 다른 市場의 需要와 供給을 재구성한다. 이처럼 재구성된 需要와 供給이 반드시 Walrasian Equilibrium을 충족시키지는 못하게 되며, 따라서 均衡을 회복하려는 경향은 價格調節에 의존할 때보다 약해진다.

을 선택하고 이를 투입하여 非交易財와 交易財의 產出量( $y_1, y_2$ )을 결정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각 기업의 공급함수와 요소수요함수는 다음과 같다.

$$y_1 = y_1(p_1, w, h) \quad e_1 = e_1(p_1, w, h)$$

( $h$  : 非交易財의 기술수준)

$$y_2 = y_2(p_2, w, k) \quad e_2 = e_2(p_2, w, k)$$

( $k$  : 交易財의 기술수준)

財貨價格의 引上이나 名目賃金の 하락은 財貨의 供給을 늘리고 要素需要를 증가시키는 반면, 기업의 기술수준향상은 該當財貨의 供給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요소수요를 반드시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특히 공급탄력성이 1보다 작거나, 기술진보의 성격상 노동력절감의 효과가 큰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政府 :**

정부는 生産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나 가계에 이전소득을 배분할 수 있고 또한  $g_i$  (단,  $i = 1, 2$ )만큼의 재화를 구매할 수 있어 政策的인 介入이 가능하다.

전체적인 市場均衡은 通常的인 需要와 供給에 의해서 결정된다. 단, 非交易財는 貯藏이 불가능하여 同 期間中 모두 소비되며 交易財의 國內超

過供給은 해외로 수출되어 貿易收支를 결정한다. 만일 價格이 신축적이라면 각 시장은 초과수요가 0이 되는 점에서 균형가격이 결정될 것이고 이러한 균형조건은 賃金( $w$ )과 非交易財價格( $p_1$ ) 평면에서 다음과 같은 均衡曲線으로 나타난다<sup>4)</sup>.

$$LMEL : l(p_1, p_2, w, I) = e_1(p_1, w, h)$$

+  $e_2(p_2, w, k)$       勞動市場 均衡曲線

$$NTEL : y_1(p_1, w, h) = x_1(p_1, p_2, w, I)$$

+  $g_1$                       非交易財市場 均衡曲線

非交易財와 交易財 사이의 조대체성 때문에 *LMEL*과 *NTEL*곡선은 ( $w, p_1$ )평면에서 右上向하는 곡선으로 표현되고 두 곡선이 교차하는 *A*점에서 이 경제의 임금과 비교역재가격은 균형을 이룬다. *LMEL*곡선을 기준으로 윗부분에서는 노동에 대한 초과공급현상이 나타나고 아랫부분에서는 노동의 초과수요현상이 나타난다. *NTEL*곡선을 기준으로 윗부분에서는 非交易財에 대한 초과수요가 나타나며 아래쪽에서는 非交易財의 초과공급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경제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영역으로 분할된다. 첫째, 노동의 초과공급 및 비교역재의 초과수요 현상이 나타나는 고전적인 실업상태인 *C*영역(classical unemployment). 둘째, 노동의 초과공급과 비교역재의 초과공급이 나타나는 케인즈적 失業狀態인 *K*영역(Keynesian unemployment). 셋째, 노동 및 비교역재의 전반적인 초과수요상태인 *R*영역(repressed inflation). 넷째, 노동의 초과수요와 비교역재의 초과공급상태인 *U*영역(under consum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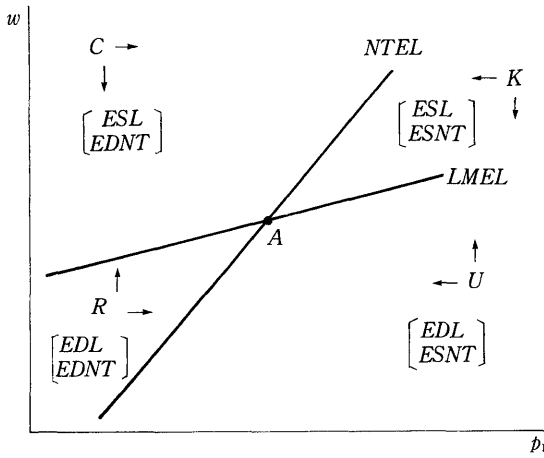
4) 한편 교역재시장의 균형은 貿易收支均衡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

$$BTL : y_2(p_2, w, k) = x_2(p_1, p_2, w, I) + g_2$$

貿易收支 均衡曲線

조대체율을 가정할 때 무역수지균형곡선(*BTL*)은 ( $w, p_1$ )평면에서 右下向하는 곡선으로 나타나며, *BTL*의 윗부분에서는 무역수지 적자가, 아래쪽에서는 무역수지흑자가 나타난다.

[圖 5]



## 2. 非伸縮의 價格下의 中長期模型

價格과 賃金이 非伸縮的이라고 假定할 경우 [圖 5]의 A점과 같은 內的 均衡이 항상 달성되지는 못한다. 價格의 非伸縮性으로 인해 A점 이외의 모든 점에서 형성된 일시적 均衡상태에서는 적어도 하나의 市場이 數量調節에 의해 청산된다. 이처럼 추가적인 數量制約에 직면한 수요함수 및 공급함수를 實效需要函數(effective demand function), 實效供給函數(effective supply function)라고 한다.

價格이 非伸縮的인 상태에서 전술한 4개 영역에서 均衡조건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자.

### i) 勞動의 超過供給狀態에서 非交易財 均衡條件 : NTEL(ESL)

노동의 超過供給狀態에서 比較역재市場은 均衡을 이루었다 해도 價格은 노동공급에 制약을 받

게 되고 그 결과 比較역재 수요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통상적인 NTEL곡선상에서 ( $w, p_1$ ) 조합은 比較역재의 초과공급이 발생하므로 實效 NTEL곡선은 [圖 6]의 (a)에서와 같이 NTEL'(ESL)로 회전하고 전반적인 초과공급영역 K가 확대된다.

### ii) 勞動의 超過需要狀態에서의 非交易財 均衡條件 : NTEL(EDL)

먼저 노동의 초과수요상태에서 노동력 사용의 우선권이 교역재산업에 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 노동시장의 數量제약은 比較역재부분에 한정되고 따라서 比較역재 공급에 制약을 가한다. 따라서 통상적인 比較역재 均衡조건에서는 초과수요상태가 되므로 실효均衡조건은 NTEL'(EDL)으로 회전하고 [圖 6](a)에서 전반적인 초과수요 영역 R(a)가 확장된다. 그런데 만약 노동시장에서 比較역재산업이 우선권을 가졌다면 比較역재시장에서 數量제약이 없으므로 [圖 6](b)에서와 같이 노동의 초과수요 상태에서 과소소비 영역인 U가 존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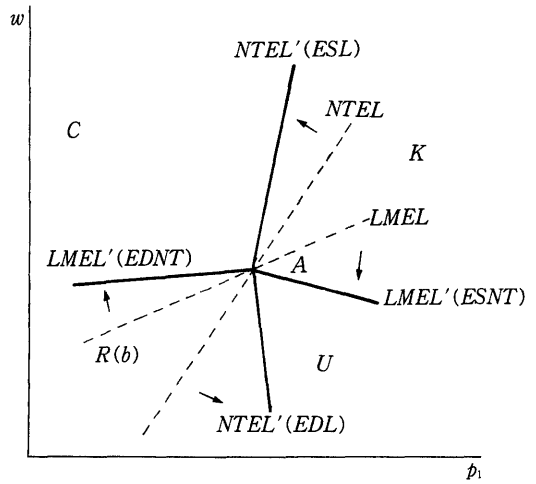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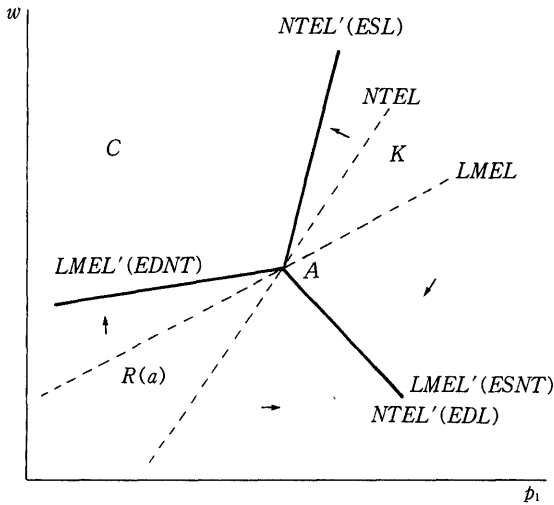
### iii) 非交易財 超過供給狀態에서 勞動市場 均衡條件 : LMEL(ESNT)

比較역재의 초과공급으로 價格은 數量제약이 없으나 企業은 공급에 制약을 받게 되고 이는 比較역재 企業의 고용에만 영향을 준다. 따라서 통상적 노동시장 均衡조건은 노동의 초과공급상태가 되어 실효均衡조건은 LMEL'(ESNT)으로 회전하는데, 이는 [圖 6](a)의 NTEL'(EDL)와 일치하므로 交易財 企業이 노동시장에서 우선

[圖 6]

(a) 노동사용의 우선권이 交易財産에 있는 경우

(b) 노동사용의 우선권이 非交易財産에 있는 경우



권이 있는 경우 勞動市場과 非交易財市場에서의 동시적인 초과수요현상은 배제된다.

태인 R영역과 전반적인 초과공급상태인 K영역은 확대된다고 보았다.

iv) 非交易財의 超過需要狀態에서 勞動市場 均衡條件: LMEL(EDNT)

### 3. 80년대 후반의 經濟狀況

비교역재의 초과수요 상태에서는 기업은 수량 제약을 받지 않지만 가계는 원하는 만큼의 비교역재를 살 수 없게 되므로 노동공급을 조절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노동시장 균형조건에서는 노동의 초과수요현상이 나타나 실효노동시장 균형조건은 LMEL'(EDNT)으로 회전하고 전반적인 초과수요영역 R이 확대된다.

1980년대 후반(특히 1988년 이후) 한국경제는 勞動의 超過需要와 이로 인한 賃金의 上昇 및 非交易財인 서비스가격의 상대적으로 빠른 상승, 서비스산업의 팽창 등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賃金과 價格이 短期的으로 비탄력적인 한국경제의 상황에서 외생적인 변화에 의해 이전의 균형점이 [圖 7]에서와 같이 전반적인 超過需要狀態인 R영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長期(소득탄력성, 기술진보) 및 短期(통화정책, 재정정책, 평가절상) 原因 몇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Neary는 非交易財價格과 勞動市場 賃金의 非伸縮性으로 인해 고전적인 실업상태인 C영역과 노동의 초과수요·비교역재의 초과공급 상태인 U영역은 축소되고, 전반적인 초과수요상

〈表 6〉 總需要의 所得彈力性

	73~75	75~78	78~80	80~83	83~85	85~88	85~86	86~87	87~88
1차	1.11	0.91	1.03	0.85	1.19	0.27	-0.16	0.38	0.65
2차	1.21	1.02	1.47	0.93	1.69	0.9	0.72	1.14	0.88
3차	1.03	1.06	1.5	1.01	1.83	0.77	0.46	0.97	0.91
전력, 가스, 수도	1.39	0.95	1.92	1.21	1.21	0.53	0.3	0.61	0.63
건설	1.04	1.13	1.42	1.01	1.64	0.65	-0.02	1.11	0.98
도소매	0.98	0.96	1.13	0.82	1.83	0.87	0.73	1.13	0.78
음식점 및 숙박	0.93	1.04	1.09	0.92	1.28	0.87	0.45	1.44	0.87
운송 및 보관, 통신	1.01	1.02	1.58	1.05	1.27	0.63	0.43	0.69	0.71
금융 및 보험, 부동산	1.1	1.13	1.67	0.95	2.40	0.93	0.62	1.15	1.14
부동산 공공행정 및 국방	1	1.04	2.18	1.01	0.74	0.84	0.72	0.66	1.05
기타 서비스	1.01	1.1	1.22	1.19	1.03	0.72	0.44	0.86	0.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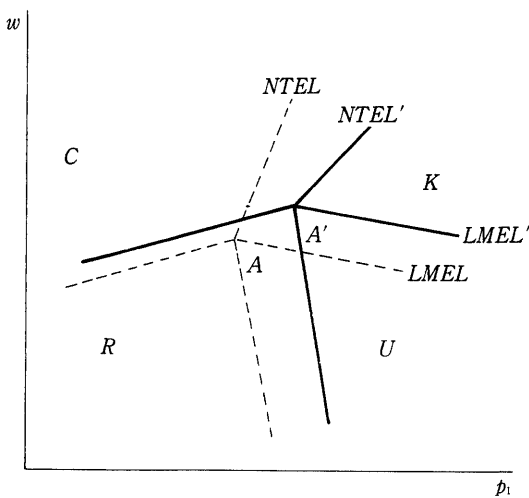
註: 소득 탄력성의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E = \frac{\Delta X/X}{\Delta Y/Y}$$

X는 각년도의 수요량이며, Y는 요소비용으로 파악한 국민소득이다.

資料: 韓國銀行, 『産業連關表』, 各年度.

[圖 7]



가. 所得水準上昇과 所得彈力性

서비스산업 확대의 원인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의 하나가 所得彈力性이다. 즉 所得이 증가할수록 非交易財의 성격이 강한 서비스재에 대한 소비지출의 비중이 점차로 커지며, 서비스의 所得彈力性은 製造業에서보다 약간 큰 것으로 밝혀졌다(表 6 참조).

이러한 所得彈力性의 차이로 인하여 급속한 소득수준의 상승은 [圖 7]에서처럼 비교역재시장의 實效均衡曲線(NTEL)을 右上向으로 이동시키고 따라서 R의 영역을 확장시킨다. 그로 인하여 이전의 균형상태는 전반적인 초과수요영역에

〈表 7〉 生産性 増加率<sup>1)</sup>

	서비스	製造業	非農業 (全産業)
1984	6.96	14.5	9.4
1985	1.52	2.3	1.5
1986	8.67	8.3	8.7
1987	8.95	2.9	7.2
1988	6.79	7.4	7.4
1989	2.63	0.1	1.6
1990	5.64	8.8	6.4
1991	3.84	6.6	4.6

註: 1) 생산성은 부가가치생산성으로 1인당 부가가치액을 의미함.

資料: 韓國銀行, 『國民所得計定』으로부터 계산.

해당되어 賃金과 非交易財의 價格은 上昇壓力을 받게 된다.

#### 나. 技術進步의 效果

技術進步가 일어나게 되면 노동절감과 그로 인한 생산량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技術進步가 일어난 분야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진다. 交易財部門에서의 技術進步( $k$ 의 증가)로 이윤이 늘어나게 되면 交易財産業에서 노동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이때 반드시 非交易財産業에도 노동의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장의 초과수요는 노동시장 균형곡선( $LM$   $EL$ )을 上方으로 이동시키며, 늘어난 소득은 모든 재화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非交易財市場 균형곡선( $NTEL$ )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圖 7]에서와 같이 이전의 균형점( $A$ )은 이제  $R$ 의 영역에 해당되므로 非交易財價格과 賃金의 上昇壓力을 받게 된다.

非交易財部門에서 技術進步( $h$ 의 증가)가 일어났다면 非交易財의 生産이 늘어나므로 非交易財産業의 필요노동투입량이 줄어들어 勞動과 非交易財의 超過供給領域이 확대된다. 즉 초기균형점( $A$ )은 전반적인 초과공급상태인  $K$ 영역에 처한다. 韓國은 1980년대 중반 이후 非交易財인 서비스部門의 生産性도 빠른 속도로 향상되었으나, 交易財인 製造業部門의 技術進步 및 生産性向上은 그보다 더욱 빨리 진전되었다. 이러한 상대적 차이는 노동시장에서 勞動에 대한 超過需要 및 소득증대에 동반한 兩財貨에 대한 超過需要를 야기하여 경제를 가격상승압력이 있는  $R$ 의 상태에 처하도록 했다.

#### 다. 擴張的 通貨政策의 效果

초기균형상태에서 통화증가는 비노동소득( $I$ )을 증가시키고 이는 노동시장과 재화시장에서 초과수요로 작용한다. 따라서 非交易財市場의 균형곡



〈表 8〉 經濟政策變數 增加率 推移

(단위 : %)

	GDP증가율 <sup>1)</sup>	통화증가율	정부지출증가율
1984	13.8	7.7	8.8
1985	11.3	15.6	12.1
1986	15.6	18.4	11.1
1987	16.1	19.1	14.5
1988	18.0	21.5	14.1
1989	11.8	19.8	20.1
1990	20.8	17.2	26.7
1991	20.1	21.9	14.0

註 : 1) GDP증가율은 경상임.

資料 : 統計廳, 『主要經濟指標』, 1992.

선(NTEL)을 右向으로 이동시키고 勞動市場의 균형곡선(LMEL)도 右上向으로 이동시켜 초기 균형점(A)은 [圖 7]의 R상태에 처하게 되어 장기적인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價格上昇壓력을 경험하게 된다.

〈表 8〉에서 보듯이 1980년대의 통화증가율을 살펴보면 1985년 이후 계속해서 통화증가율이 늘어났으며, 1988년 21.5%로 최고에 달한 이후에도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통화팽창은 1970년대 이후에는 찾아보기 힘든 정도로 높고, 이로 인한 효과는 非交易財의 높은 所得彈力性 및 낮은 技術進步와 함께 韓國經濟가 경험한 非交易財 價格上昇壓力的 原因이 되고 있다.

#### 라. 財政政策의 效果

정부의 交易財 구입( $g_2$ )은 貿易收支에만 영향을 주지만 非交易財 구입( $g_1$ )의 변화는 非交易財 價格決定에 영향을 준다. 특히 이는 직접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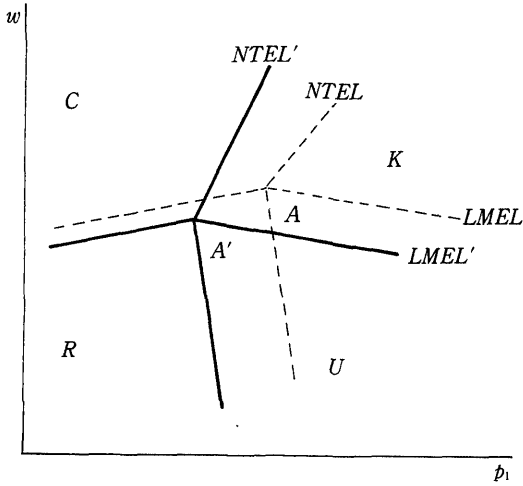
비교역재 수요에 영향을 주어 통화정책보다 효과가 더 크다. 단, 균형예산의 확대를 통한 財政支出의 증가시에는 非交易財의 超過需要狀態下에서 勞動市場均衡[LMEL(EDNT)]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난 10년간의 정부지출증가율을 보면 1985년 이후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1980년대 후반에는 GDP증가율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건설을 포함한 非交易財에 대한 政府支出이 증대되어 非交易財의 價格上昇의 한 原因이 되고 있다.

#### 마. 平價切上의 效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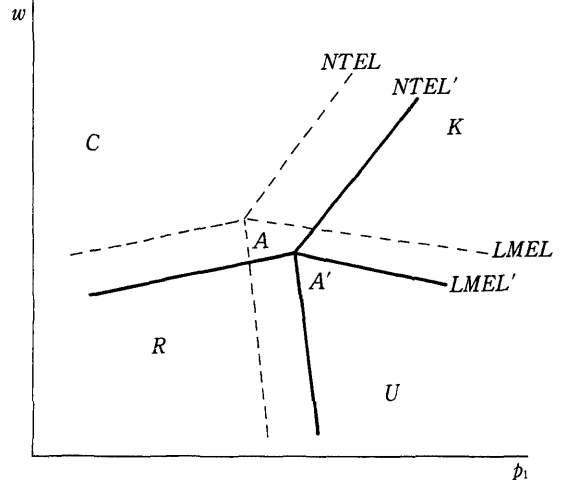
平價切上은 交易財部門의 이윤을 축소시키고 交易財部門의 勞動需要를 감소시켜, 非交易財市場의 노동수요제약을 완화시킨다. 즉, 勞動市場의 超過需要領域이 줄어들다. 交易재와 비교역재 사이에 粗代替性을 가정하면 交易재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非交易財市場의 초과공급영역이 확대된다. 따라서 [圖 8](a)에서 보듯이 이전

[圖 8]

(a) 교역재와 비교역재가 대체재일 때



(b) 교역재와 비교역재가 보완재일 때



의 균형점(A)은 K의 영역에 처한다. 이상은 긴축적 통화정책의 효과와 동일하다.

그러나 交易財와 非交易財間에 補完性을 가정한다면, 平價切上으로 價格이 하락한 交易財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非交易財의 소비도 증가하게 되어 非交易財에 대한 超過需要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는 [圖 8](b)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이전의 균형점(A)은 K가 아니라 C의 상태에 처하게 된다.

즉 平價切上은 交易財와 非交易財가 대체성을 갖는다면 지속적인 通貨增加나 財政膨脹 등의 효과를 서로 상쇄하여 非交易財의 초과수요를 억제할 것이다. 그러나 交易財와 非交易財가 보완재일 경우 平價切上은 通貨增加나 財政膨脹과 마찬가지로 非交易財市場의 超過需要를 유발할 것이다.

1980년대를 통해 交易財인 製造業製品과 非交

易財인 서비스간의 대체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보완재성격이 증대되고 있다. 서비스部門의 총수요에 대한 中間需要의 비중(중간수요율)은 1980년의 31.8%에서, 1988년에는 34.5%로 증가했으며(表 9 참조), 이는 産業構造의 고도화에 따르는 광고, 정보, 연구용역, 디자인, 유통, 통신 등 交易財와 보완관계에 있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데에서 기인한다. 1985년 이후 1989년까지 계속되는 한국의 平價切上은 이처럼 製造業部門과 서비스業部門의 보완적 성격이 강해짐에 따라 우리 경제의 상황을 K영역보다는 C영역으로 이동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균형 회복과정에서 賃金上昇壓력은 다소 완화되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서비스價格의 상승압력은 가중되었다.

〈表 9〉 産業別 中間需要率

(단위 : %)

	1980	1985	1988
1. 농림어업	72.6	67.4	69.6
2. 광업	99.7	100.2	100.8
3. 제조업	55.0	56.1	54.1
4. 서비스업	31.8	30.5	34.5
전력·가스·수도	81.4	79.9	81.0
건설	9.8	9.9	11.3
도소매	42.7	41.1	43.6
음식·숙박	36.6	36.8	29.6
운수·보관·통신	36.8	39.9	44.5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61.8	61.3	62.4
공공행정 및 국방	1.3	0.5	0.6
기타서비스	9.3	8.4	9.5
5. 기    타	90.1	95.4	93.6
全産業平均	51.4	50.9	49.9

註 : 中間需要率 = (中間需要額 / 總需要額) × 100.

資料 : 韓國銀行, 『産業連關表』, 各年度.

#### IV. 서비스産業의 發展方案

1980년대 중반 이후 韓國經濟는 새로운 經濟發展環境을 경험하게 되었다. 勞動의 超過需要 속에서 賃金上昇은 서비스部門뿐만 아니라 製造業部門의 原價引上要因이 되었다. 그러나 交易 가능한 製造業部門은 輸入競争과 製造業의 供給彈力性 덕분에 價格上昇 한계에 직면한 반면, 非交易財 성격이 강하고 供給이 非彈力的인 서비스部門은 價格을 지속적으로 引上시킬 수 있었으므로

資本利益率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서비스업의 資本 및 勞動의 雇傭比重이 증대되었다.

더구나 Ⅲ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87년 이후 通貨膨脹, 非交易財部門에 대한 財政支出擴大, 平價切上, 製造業部門에 비해 정체된 非製造業의 生産性 등은 非交易財 위주인 서비스부문의 超過需要와 勞動市場의 超過需要를 더욱 자극하였다. 이에 따라 非交易財市場과 勞動市場의 不均衡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不均衡의 결과 최근 韓國經濟에서는 서비스산업이 비대해지고 동시에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이에 대하여 서비스산업 비중증

대를 製造業 競爭力弱化的 주요원인으로 인식하고 製造業 競爭力強化對策으로 서비스업에 집중되는 인력을 억제하고 製造業으로 유도하려는 政策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고용비중의 증대는 경제발전단계상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 이와 같은 製造業으로의 단순한 量的인 인력유도 정책은 完全雇傭에 접근하고 있는 1988년 이후의 產業政策方向으로 부적절하며, 오히려 產業構造高度化를 지연시키고 장기적으로는 製造業의 競爭力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

製造業 競爭力強化는, 서비스産業으로의 인력투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사용하기보다는 自動化와 情報化를 통한 生産性向上과 그로 인한 勞動力投入을 절감하여 제조업의 勞動需要를 감소시키는 것이 장기적 해결책이 될 것이다. 또한 무조건적인 製造業 위주의 產業政策에서 탈피하여 韓國의 여건과 經濟發展水準에 맞는 서비스産業政策을 개발하고 서비스부문에 대한 長期發展方向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는 서비스交易에 관한 일반협정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多者間協商을 통하여 서비스交易의 自由化 및 市場開放을 활발히 진행시켜 갈 것이다. 韓國은 서비스産業의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미 세계 20대 서비스交易國으로 부상하였으나 先進國에 비하면 시장의 협소, 심한 규제, 낮은 기술수준 및 생산성, 연구개발의 미흡 등으로 아직 구조가 취약한 형편이다. 따라서 서비스交易自由化가 국내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생각해 볼 때, 國內 서비스産業의 조정 및 적응문제에 미리 대처함으로써 수출기회를 확대하

고, 경제효율증대 및 기술이전의 혜택, 쌍무주의 압력의 극복 등 자유화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 1. 均衡回復政策

前章에서 설명한 것처럼 韓國經濟는 계속되는 통화팽창과 재정지출의 확대에 의하여 均衡에서 이탈하여 非交易財 價格上昇의 압력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非交易財 價格上昇壓力을 완화하고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非交易財에 대한 政府支出을 감소시켜야 하며 通貨量增大를 억제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圖 7]의 勞動市場과 非交易財市場의 均衡曲線(LMEL과 NTEL)이 左下向으로 이동하여 均衡狀態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交易財部門과 非交易財部門의 기술진보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서비스部門의 정보화·기계화를 통한 技術向上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인력배양을 통해 보다 질 좋은 서비스産業의 육성을 유도해야 한다.

## 2. 製造業 競爭力 向上을 위한 서비스産業政策

서비스産業의 生産性向上과 效率化는 製造業分野의 國際競爭力向上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製造業 競爭力向上은 生産過程뿐만 아니라 經濟·社會全體의 效率性向上이 전제가 되어야지 단순히 製造業에 人力投入量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중반까지와 같이 製造業의 雇傭量을 증대시킴으로써 製造業生産量

을 늘리는 經濟運用 및 產業政策에서 벗어나, 製造業의 勞動生産性 向上과 高附加價值産業으로의 質的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 製造業育成 자체만으로 불충분하며 財貨生産의 情報化·技術化를 補完하는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效率性向上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전문 서비스 및 경영혁신, 서비스발전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정보산업의 개발로 경제활동의 중심이 현재의 재화생산에서 정보·지식산업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企業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 엔지니어링, 광고, 회계, 유통 등 기업관련 전문서비스업, 또한 미래산업사회의 필수요건인 정보모집·가공·생산·유통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컴퓨터·정보통신 관련서비스는 經濟先進化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또한 금융 등 국내적 요인으로 自律化가 어려운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開放을 통한 自律化與件造成 및 競爭促進方案을 검토하여야 한다.

### 3. 서비스産業의 自律化

전체 산업발전에 직결되는 기본 서비스분야의 技術進歩와 生産性向上을 위해서는 능동적인 開放 및 規制緩和를 통하여 競爭을 촉진하여야 한다. 대부분 無形의 재화인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資格制度 및 회사설립에 대한 認·許可制度를 시행하고 있는데, 規制制度가 분야에 따라서는 서비스産業 發展의 制約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몇년간 한국은 經濟自由化 政策을 추진하여

왔지만 서비스산업에 있어 자유화 속도는 매우 느린 상태이며, 설립제한, 업무제한, 가격제한, 경영인 자격제한 및 外國人 투자제한 등 각종 규제제도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서비스산업 주무기관은 현행의 規制制度를 전면 재검토하고 최근의 자유화 성과를 평가하며, 나아가 앞으로의 자유화에 관한 계획과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경쟁이 가능하나 行政官廳의 內規와 慣行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단, 안전, 환경, 소비자보호, 위생 및 독점방지 등에 대한 규제는 계속해서 보완·개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先進經營管理技術의 도입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공헌이 매우 큰 外國人投資는 그 효익·비용에 대해 신중한 평가를 거쳐 이익이 큰 부분부터 조기개방하여 自律化를 앞당겨야 한다.

### 4. 서비스業의 品質과 免許 問題

서비스상품은 무형이고 품질을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品質管理를 위해 많은 업종, 예를 들어 변호사, 의사, 회계사, 공정기사 등에서 免許制度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資格試驗制度의 결함이나 배타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몇몇 업종에서는 자격을 갖춘 인력의 부족현상 때문에 서비스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면허를 빌려주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자격인원을 확충하여 자격취득인력을 확대함으로써 시장수요에 부응하고, 한편으로는 각종 자격재심사제도를 채택하여 서비스質을 한층 제고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外國人直接投資를 통하여 서비스업의 經營技術과 專門人力의 도입이 급증하고 있다. 정규 학교교육과 관련학과의 정원증대 이외에 정부는 직업훈련센터를 이용하거나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職業訓練을 실시함으로써 서비스업의 人力培養에 힘써야 한다.

또한 기업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거나 자유화하기 위해 업종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기업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자본, 인적 구성, 정보 등 서비스산업의 競爭力을 좌우하는 요건들을 업종별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고(예: 개방과 함께 등록기준의 재조정 등), 규제완화에 따른 과당경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정책을 병행하여야 한다.

## 5. 서비스市場開放 補完對策

韓國의 서비스産業은 구조적으로 영세하고 정부규제를 통해 장기간 보호를 받아 왔으며, 市場開放이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UR서비스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달리 전면적인 개방이 불가피하다. 對外開放에 직면한 서비스부문에 해외로부터의 경쟁이 도입될 경우 단기간내 構造變化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는 1970년대의 저임금을 이용한 勞動 서비스보다는 資本集約的 서비스産業, 高級 人的 資源을 근거로 한 서비스産業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가올 국제적 서비스분업에 대비하여 競爭力 있는 서비스産業分野를 육성하고 競爭力이 없는 분야는 축소하는 대규모 構造

調整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한편 市場開放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競爭力이 취약한 업체의 도산, 실업발생에 대한 産業構造調整方案이 강구되어야 하며, 긴급수입 규제, 불공정무역행위 등 國內産業에 미치는 피해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규제 제도를 정립·보완해야 한다. 동시에 自由化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先進國企業으로부터 경쟁을 증대시키고 기술이전을 유도함으로써 國際競爭力을 강화하여야 한다.

## V. 結 論

韓國經濟에서 GNP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부문은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非生産的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 왔으며, 부문간 組織的이고 綜合的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韓國經濟가 지금까지 製造業과 輸出政策에 크게 의존하여 성장해 온 까닭에 서비스産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때문이다.

한국은 1988년 이후 GDP, 고용, 자본비중면에서 서비스部門 擴大와 製造業比重 減少라는 構造的 變化를 경험하고 있다. 先進國의 경험을 통해 보면 經濟成長이 서비스部門의 成長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서비스부문의 成長과 效率性이 經濟成長에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효율적인 서비스部門 下部構造는 經濟內 여타부문의 성장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사업서

비스 또는 生産者(中間)서비스의 건설한 발전은 産業構造의 高度化와 經濟發展에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UR서비스協商的 進행에 따라 韓國서비스市場의 지속적인 개방은 불가피하고 韓國도 國

際서비스分業의 일부로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비하여 서비스部門의 競争導入을 통한 國際競爭力 배양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 參 考 文 獻 ◁

權五奎, 『서비스市場의 開放과 우리의 對應政策 方向』, 大韓商工會議所, 1989.

俞鎮守, 『우리나라 서비스産業의 生産性變化와 生産性的 國際比較』,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

李相學, 『우리나라 서비스交易의 構造와 推移』,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

統計廳, 『主要經濟指標』, 各年度.

한국은행, 「우리 經濟의 서비스化 現況」, 『조사 통계월보』, 1990. 4월호, pp. 21~37.

\_\_\_\_\_, 『國民所得計定』, 1990.

\_\_\_\_\_, 『産業連關表』, 各年度.

中和經濟研究所, 『서비스型 經濟發展研究』, 1991.

Bai, Moo-Ki, "The Turning Point in the Korean Economy," *The Developing Economies*, Vol. XX, No.2, June 1982, pp. 117~140.

Bhagwati, Jagdish, "Splintering and Disembodiment of Services and Developing Nations," *The World Economy*, Vol. 7, 1984, pp. 133~144.

Gemmell, Norman,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evelopment*, St. Martin's Press, 1986.

Fei, John and Gustav Ranis, *Development of the Labor Surplus Economy*, Richard Irwin Inc., Homewood, 1964.

Giarini, Orio(ed.), *The Emerging Service Economy*, Pergamon Press, 1986.

Inman, R., *Managing the Service Economy; Prospects and Proble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Kakabadse, Mario,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Prospects for Liberalization in the 1990s*, The Atlanti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1987.

KIEP, *Growth of Structure of Service Industry of Korea*, 1986.

Lewis,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r," *The Manchester School*, May 1954.

Neary, J. Peter, "Nontraded Goods and the Balance of Trade in a Neo-Keynesian Temporary Equilibriu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Nov. 1980, pp. 403~429.

Nusbaumer, Jacques, *The Service Economy: Lever to Growth*, Kluwer Academic Pub-

- lisher, 1987.
- \_\_\_\_\_, *Services in the Global Market*, Kluwer Academic Publisher, 1987.
- OECD, *Economic Surveys ; Japan*, 1990.
- Petit, Pascal, *Slow Growth and the Service Economy*, Frances Pinter, 1986.
- Pyo, Hak K., "A Synthetic Estimate of the National Wealth of Korea," 1992.
- Riddle, Dorothy, *Service-Led Growth*, Praeger Publishers, 1986.
- Sampson, Gary P. and Richard Snape, "Identifying the Issues in Trade in Services," *The World Economy*, Vol. 8, June 1985, pp.171~182.
- Schott, Jeffrey, *Completing the Uruguay Roun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0.
- Shelp, R., *Beyond Industrialization*, Praeger Publishers, 1981.
- Tucker, Ke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Routledge, 1988.



---

## **Is Higher Land Holding Tax the Solution for Korea's Land Problems?**

*Son Jae-young*

This paper examines the increasingly popular belief that higher holding tax will be the ultimate solution for Korea's land problems which include excessive concentration of ownership, high and rapidly increasing land prices, and rampant speculation.

In principle, land holding tax can supplement capital gains tax in recapturing capital gains from land or suppress returns from land investment returns in line with other forms of asset. This paper shows, however, that the tax burden must be drastically increased for the tax to achieve such goals, and the resistance from tax payers is sure to be intense.

As long as the price expectation remains high, as in Korea where land prices have increased 19% annually during the past 18 years, even such increase in the tax may have little impact on landlords' behaviors, the price trend, or the ownership structure.

More effective solutions for Korea's land problems are relaxing land use regulations to encourage the supply for urban land and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capital gains tax to recapture windfall gains from land. This paper also notes that the so-called "lock-in effect" of the capital gains tax seems to be exaggerated.

Land holding tax should be viewed as a revenue raiser for local governments rather than an anti-speculative policy tool. Abandoning unattainable policy goals and adhering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taxation, will make land holding tax much simpler, and will better function as a local revenue source.

## **Growth in the Service Sector and Its Policy Implication**

*Kim Ji-hong*

Korean economy has experienced rapid expansion of the service sector at the expense of the manufacturing sector since 1988, which was caused by the wage increase and the appreciation of Won. The government worried about the deindustrialization and the erosion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various measures were taken to entice labor force into the manufacturing sector.

However,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expansion of the service sector is inevitable phenomenon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balanced industrial policies are desirable. In addition, the Uruguay Round Service Negotiations require liberalization of the service market and internationalization of the service industries.